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길 새 정부의 체육 정책은 어떤 방향일까.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시절 ‘스포츠는 복지’라는 철학을 근간으로 한 ‘6대 스포츠 정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두산-KT의 한국시리즈가 열린던 고척돔.

스포츠동아DB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케이(K)팝과 한국영화·드라마 등 대중문화 분야의 지원책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이 상생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을 호소했다. 사진은 대표적인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체육인 공제회 설립... ‘스포츠 복지’ 터 닦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는 물론 체육 및 문화예술 분야 또한 적잖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선거운동 기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결이 다른 정책들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체육, 문화예술,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스포츠 부문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대한민국 체육인대회’를 통해 현 정부의 스포츠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체육계 현실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합숙훈련 폐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한 7개 권고안을 발표해 체육계에서 찬반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편 가르치지 않고, 스포츠계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

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체육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윤 후보는 ‘스포츠는 복지’라는 철학을 근간으로 한 ‘6대 스포츠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운동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적인 운동으로 의료비가 절감되면 건강보험료 환급액 이상의 공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운동 여부는 ‘국민운동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확인한다.

100만 체육인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해 은퇴 체육인의 기본생활 보장도 약속했다. 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과 손해보험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손해보험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조기 은퇴하는 선수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경력개발 교육과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계 사용을 확대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타 기금으로 나가는 돈을 조정해 체육사업 예산 비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국민체육진흥기금 2조6000억 원 중 타 기금 전출 총액이 1417억 원이고, 그 밖의 여유자금 운용금액은 4000억 원이었다.

일자리 창출 등 은퇴한 체육인 생활 보장
체육진흥기금 예산 조정해 체육사업 확대
합숙훈련 폐지 등 ‘혁신위 7개안’ 손볼 듯

K콘텐츠 일자리 창출 등 한류 적극 지원
OTT 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구축
업계 “고사 위기 문화계 신속 지원” 주문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스포츠산업(체육시설, 스포츠용품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업계를 돕겠다는 의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스포츠 지도사를 파견하고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해 영·유아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초·중·고교에도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도 공약했다. 장애인, 노인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도자, 프로그램, 시설 보급을 늘리는 한편 취약계층 대상 체육 서

비스 제공하는 스포츠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해 스포츠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중문화 부문

“상생 가능한 케이(K) 콘텐츠 발전이 중요”
윤석열 당선인은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기치 아래 다양한 문화예술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팝과 한국영화·드라마 등 대중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문화예술인 권익·저작권 적극 보호’를 비롯해 ▲세계 공감 창작 공모 플랫폼 운영 ▲해외 마케팅·디지털 역량 이 부족한 프리랜서·중소 콘텐츠업체 포괄적 지원과 해외 현지 제작 지원 체계 구축 및 확대 ▲케이 컬처 스타트업 지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NFT(대체불가토큰), 메타버스와 연계된 미래 선도형 청년 일자리 50만 개 창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등이다.

이에 대중문화계는 OTT가 최근 시장을 급속히 키워가며 케이 콘텐츠의 주류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만큼 관련 정책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한 OTT 플랫폼 관계자는 10일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공략에 위기감을 느끼는 ‘토종’ 플랫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장 등 기존 플랫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확산 사태로 생존 위기에 처한 영화계를 비롯해 대중문화계는 이를 타개할 즉각적인 맞춤 방안과 구체적 예산 편성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영화관계자는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 성과가 무색할 정도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다”면서 “긴급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적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을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뚜렷이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를 “구조적으로 확립해 성과 계약 외에 창작발표 내용에 간섭하지 않겠다”면서 “예술지원 기능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이승미 기자 smilee@donga.com

주택 250만호 신축...공급 늘려 미친 부동산 잡는다

경제 부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초접전 끝에 승리한 10일 오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46p(1.47%) 오른 2660.86로 상승 출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폭등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소 진정된 것이 주요 요인이지만, 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윤 당선인의 주요 경제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식·암호화폐 시장 활성화 노력

먼저 주식 시장에서는 세계 부담 완화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유지를 유지하고,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자본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주

식·채권·펀드 등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로 과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공약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전면에 내건 만큼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음에도 이중과세를 한다는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이 높아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는 ‘뜨거운 감자’ 공매도와 상장사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갬 뒤 상장하는 물적분할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내놓았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10% 이상 급등락하는 등 변동폭이 큰 경우 강제적으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기능이다. 즉 공매도에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 특정 종목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자동으로 중단 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물적 분할 후 별도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법제화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표시된 10일 오전 하나은행 주식 전광판.

뉴시스

원가주택 등 청년·신혼부부에 싸게 분양
LTV 완화·중부세, 재산세와 통합 추진
주식양도세 폐지·암호화폐 활성화
경제단체들 “친기업 환경 조성율” 주문

통한 시장 활성화를 노린다. 윤 당선인은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국내 암호화폐 발행(ICO) 조건부 허용, 디지털자산기

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법, NFT(대체불가능 토큰) 거래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암호화폐 시장의 관리 및 감독을 전담하는 디지털산업진흥법 설치 공약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공급확대·규제완화로 부동산 문제 푼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세제·금융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시장이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 130만~150만 호 등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건축 판정을 쉽게 받도록 규정을 바꾸고, 초과이익부담금을 줄이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해 관련 공급 물량도 늘린다. 공공 주도 공급 50만 호를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로 꾸려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내놔다.

공급 확대는 적절한 금융·세제 조치가 동반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는 4억 원 한도에서 3년 동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원 대책도 공약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도 계획하고 있다. 단기간에 급등한 공시가격을 다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주택자 세율은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도 유도할 예정이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상한 비율을 낮추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아예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파격 혜택도 내놔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10일 윤 당선인을 축하하며, 경제계 파트너로서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그동안 한국 사회에 나타난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염원을 전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